

김현철 측 문자메시지 조사 착수

(전북도의원)

진안군수 출마 선언 직후여서 사전 선거운동 논란... 진안선관위 "위법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

6.13 지방선거를 80여일 정도 앞두고 불법·탈법·편법 선거운동이 활개를 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26일 진안군민들은 "지난 22일 공무원과 주민 등 불특정 다수 수백명~수천명에게 '여론조사(진안군수직합도)가 24일~25일 실시됩니다. 02~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김현철'을 선택해주세요' 라는 문자메시지가 (010-3072-9973)의 핸드폰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김현철 도의원은 지난 21일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진안군수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직후여서 김 의원이나 측근들이 벌써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진안군민들은 "군수에 당선되고 싶으면 정책이나 앞으로 진안군 발전 등을 제시해 정책대결로 정당당당하게 심판을 받아야지 후보 등록(4월 1일부터 등록)도 하기 전 이

렇게까지 불법·편법 선거운동을 펼치면 비겁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상시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뿐이다.

또한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진안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자를 불러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CCTV 통합관계센터는 안전과수꾼

전주시 CCTV통합관계센터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안전과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CTV통합관계센터는 22일 저녁 완산구 효자동 한 주택가에서 범죄 용의자가 도난 차량을 운행하다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포착한 후 즉시 경찰에 알렸다. 이 용의자는 통합관계센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찻값을 치르게 됐다.

또 앞서 지난 15일 저녁에도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이를 추적해 경찰에 신고, 현행범으로 검거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실종된 치매 노인을

발견해 신고하거나 공원에서 쓰러져 있는 시민을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등 절도와 폭력, 교통사고, 청소년선도 등 지난 해 총 1946건의 범죄예방 및 자료제공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시에는 총 2344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관계요원 18명이 24시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전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남종희 시민안전담당관은 "CCTV 관계센터의 영상자료는 범죄현장의 가장 확실한 목격자이자 결정적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국민연금공단 전주관광택시 활성화 협약

전주시와 국민연금공단이 전주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관광택시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택시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돌며 명품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택시로 지난 해 9월부터 운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26일 국민연금공단 9층 임원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와 택시조합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관광택시 이용과 공단 임직원의 문화·관광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주관광택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는 26일 국민연금공단 9층 임원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와 택시조합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관광택시 이용과 공단 임직원의 문화·관광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주관광택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전주시택시조합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임직원과 방문객에게 전주관광을 위한 정보제공 등 관광편의를 제공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임직원과 방문객이 전주관광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약속했다.

시가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전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은 타 도시에서 온 직원과 방문객, 교육생이 많아 전주 관광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과의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필요 시 타 기관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편리하고 실속 있는 전주관광택시에 대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용자들의 관광편의를 돕고 전주관광택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나아가 관광택시 운행자를 대상으로 친절과 관광가이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 오는 4월부터는 관광택시에 전주관광 홍보 영상이 수록된 태블릿 PC를 비치하는 등 전주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자살 재시도 예방 앞장선다

5개 응급의료기관과 방문형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협약

전주시가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역 5개 응급의료기관과 손을 잡았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일 예수병원과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고려병원, 열린병원 등 전주시역 5개 응급의료기관과 방문형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문형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시도 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대한 응급처치 후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이루어진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향후 대상자에게 주기적인 면담 및 전화상담, 치료

및 지역자원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실시해 대상자가 자살 재시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에서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후송된 사람은 총 338명으로 응급기관별로는 예수병원 152명(45%), 전북대학교병원 138명(40.8%), 대자인병원 24명, 전주병원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매주 수요일 조기평가 클리닉, 우울, 자살척도 검사 및 상담, 지역사회 기관 연계, 자살유가족 심리지원 연계 및 자조모임 등을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jimind.com)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73-6995~6)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안희정, 구속심사 불출석... "참회의 뜻"

사유서 제출... 안 전 지사 "국민들이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 광형성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20분여 전인 오후 12시40분께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불출석 결정에 대해 "안 전 지사의 의사"라며 서류심사로 진행해달라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는 다 이뤄졌다는 판단"이라며 "안 전 지사가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동안 보여왔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에게 출석을 설득했으나 안 전 지사가 "국민들이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우선 오후 2시께 잡혔던 심문기일을 다시 잡거나, 서면심리로 대체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으로 강제집행에 나서 안 전 지사를 법정에 데려올 수도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민 기자

1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전주시는 2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군부대, 경찰, 소방서, 교육계, 병무청, 교도소 등 통합방위 관련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1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를 열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인 김승수 시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 등 한반도 정세가 전환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로 다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통합방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통합방위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위원을 30인 이내로 증원하는 등 중전보다 탄실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왔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참여 기관들도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